

시민안전실

I . 일반현황

II . 2018 주요성과와 2019 정책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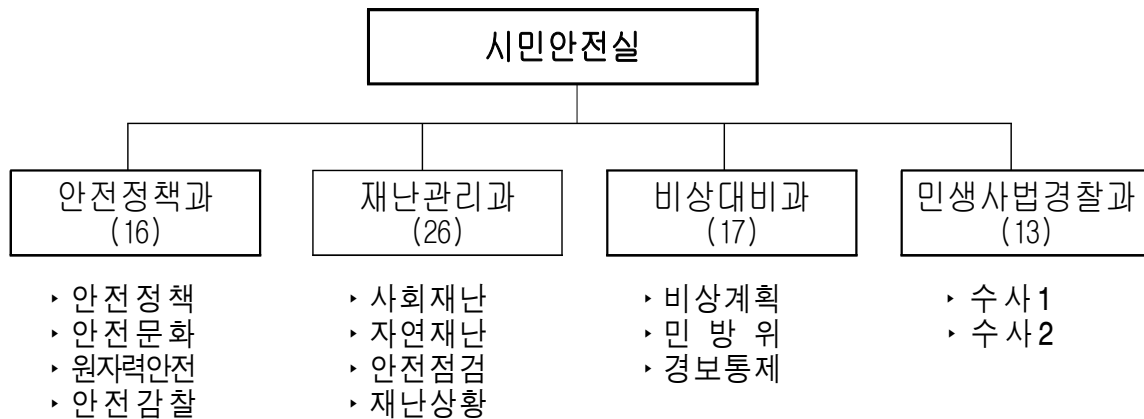
III . 2019 주요업무 추진계획

I. 일 반 현 황

① 시민안전실의 주요기능

- 지역안전관리계획 등 종합적 안전정책 수립 시행, 안전문화운동 전개
 - － 시기별 안전대책, 안전체험 교육, 방사능 방재대책 등 안전도시 기반 조성
-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민·관협력 등 총괄적인 재난대응
 - － 재난안전한국 훈련, 매뉴얼 정비, 풍수해피해 저감 등 자연재해 예방 대응
- 재난안전 상황관리와 시설물 안전점검으로 안전사고 예방
 - － 재난예·경보시설 운영으로 신속한 상황전파, 시특별대상시설 점검 관리
- 국가 비상대비 및 통합방위 태세 구축
 - － 비상대비 훈련, 동원자원 관리, 충무계획수립, 민·관·군 통합방위 협력 제고
- 민방위 대비태세 및 경보전달 대응체계 확립, 특별사범 경찰 운영
 - － 민방위 교육·훈련, 시설·장비 점검, 경보발령, 유해사범 단속 민생안전 확보

② 조직 및 인력 : 4과 12팀(정원 72명)



③ 2019년 예산현황 : 32,767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안전정책과	재난관리과	비상대비과	민생사법경찰과
계	32,767	29,188	2,295	1,061	223
일반회계	16,465	12,886	2,295	1,061	223
특별회계(소방안전)	3	3	-	-	-
재난관리기금	16,299	16,299	-	-	-

* 일반회계 :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2,302백만원 포함 / 순수 일반회계 4,163백만원

Ⅱ. 2018 주요성과와 2019 정책방향

2018년에는

지역안전관리계획 시행, 원자력안전 협약 이행, 폭염 등 신속한 재난대응과 상황전파, 민·관협력의 국가안전대진단, 민생사범 단속 등 안전환경 조성에 매진

2018 주요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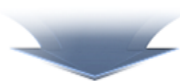
- 지역안전 총괄관리 등 현장중심의 시민공감·참여형 정책 추진
 - ▶ 지역안전관리계획(97개), 행락철, 여름철, 겨울철 등 시기별 대책
 - ▶ 시민안전교실(497개소), 안전신문고(16,160건), 안심마을 조성(3개소)
 - ▶ 원자력안전협약 이행지침 마련, 방사선 이동측정시스템 구축운영(주1회)
- 태풍, 폭염 등 선제적 재해예방과 신속한 상황전파 및 대응
 - ▶ 국가안전대진단(8,419개소), 예·경보시설 확충(80개소), 안전한국훈련(2주간)
 - ▶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154일), 무더위쉼터(915개소), 내진보강추진(82개소)
- 비상대비태세 확립 및 유해사범 단속을 통한 민생안정 도모
 - ▶ 통합방위협의회(4회), 대피시설 정비(452개소), 경보시설 운영(56개소)
 - ▶ 유해사범 단속(883개소, 검찰송치 99건) 치안협의회(3회)
- ※ 민방위업무평가 우수기관(총리 표창), 겨울철 자연재해대책추진 우수기관(1억원)
- ‘18년 재난안전특별교부세 확보(예·경보시설 설치사업 등 225억원)

2019년에는

안전사고 감축을 통한 안전선진국 도약의 정부 정책에 발맞춰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 일류도시 대전’ 가꾸기 역점 추진

정 책 환 경

- ▶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해 및 대형재난 발생빈도 증가 추세
- ▶ 지진과 이에 따른 시설물 붕괴, 원자력안전 등 복합재난 발생 우려
- ▶ 인구고령화로 안전취약계층 증가와 도시기반시설 노후 심화
- ▶ 도로교통, 축제장 등 일상생활 속 위험요소 증대



2019 정 책 방 향

- ▶ 지진, 태풍 등 대형복합재난 대비 종합적 안전관리대책 추진 강화
- ▶ 민·관 협력의 통합 관리체계 구축과 협업 대응
- ▶ 안전체험과 맞춤형 교육 등을 통한 안전문화의식 확산과 참여 활성화
- ▶ 미세먼지 등 생활안전 증진과 시민건강을 해치는 유해사범 단속 강화

Ⅲ. 2019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안전 일류도시 조성을 위한 통합 안전관리 강화
2. 체계적 원자력 안전관리와 상시적 감찰활동
3. 현장중심의 재난예방과 사회안전망 구축
4. 재난대응 역량 제고 및 민·관협력 확대
5. 지역안보태세 확립 및 생활민방위 역량 강화
6. 시민생활건강 분야 특별사법경찰 활동 강화

1. 안전 일류도시 조성을 위한 통합 안전관리 강화

- ◇ 안전관리 주체와 지역공동체가 참여·협력하는 통합적 안전협업 강화
 - ◇ 체험위주의 교육과 신고 강화로 사고 시 대처능력 배양 및 안전환경 조성
-

① 통합적 안전관리 협업 강화

- (지역안전관리계획 시행) 재난유형별 예방·대응대책 총괄 관리 강화
 - － 자연·사회재난(83개 유형), 교육청·기상청 등 재난관리책임기관간 협업
- (안전도시종합계획 이행) 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 54개 과제
 - － 화재, 지반침하, 폭염, 미세먼지 등 과제별 관리지표 설정 체계적 실천관리
 - － 여름철, 겨울철, 봄·가을 행락철, 개학기 등 시기별 안전대책 추진 강화
- (공공부문 산재 제로화) 공공 수행사업 안전관리 감독 철저
 - － 건설·건축공사장 비계설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노후 하수관로공사 등

②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맞춤형 안전교육 실시

- (안전교육 강화) 안전 취약계층 대상 중점 교육 강화
 - － 영·유아부터 노년기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안전교육 실시
 - － 장애인·노인,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안전교육 확대
- (참여·체험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참여하고 체득하는 교육 강화
 - － 시민과 市 직원대상 안전체험 교육 지속 추진 / 119시민체험센터
 - － 시민참여형 안전문화 행사 개최 / Safe대전 안전체험한마당, 안전골든벨 등

③ 시민과 소통하는 안전문화운동 봄 조성

- (시민주도형 안전환경 조성) 지역민 주도 안전한 지역만들기 추진
 - －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생활주변 안전위험 요소 신고강화 및 신고포상금제 운영
 - － 마을단위 위험요인을 발굴 개선하는 ‘안심마을 조성사업’ 추진
- (안전생활 실천 봄 확산) 생활 속 안전을 실천하는 캠페인 및 홍보 강화
 - － 안전점검의 날(매월 4일) 운영 및 주간안전예보(TBN대전교통방송) 지속 홍보
 - － 대규모 행사연계 안전문화 홍보부스 운영 및 다양한 홍보콘텐츠 제작 배포

2. 체계적 원자력 안전관리와 상시적 감찰활동

- ◇ 체계적 원자력 안전관리와 방사능 방재시스템 구축으로 시민안전망 강화
- ◇ 선제적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재난관리책임기관 안전관리 실태 감찰

① 체계적 원자력 안전관리 추진

- (제도 개선) 원자력 시설에 대한 시민감시와 자치단체 감독권 제도화
 - － 원자력안전법 개정 또는 특별법 제정 추진(민간환경 감시기구 설치 운영)
- (시설 안전) 원자력시설 기관의 안전관리 이행실태 점검
 - － 안전협약 이행 점검, 원자력 시설 안전대책, 신규사업 안전성 확인
 - － 시민검증결과 후속대책 추진, 연구원 추진상황 점검 시민안전 확보
- (시민 안전) 시민 불안해소, 원자력시설 시민감시망 강화
 - － 원자력안전협의회 활성화(분기1회 이상), 방사능 환경조사 및 영향평가
 - － 마을활동가 방사능측정기 지급(15백만원)

② 방사능 방재대책 내실화

- (방사능 방재시스템 강화) 방사능 비상 등 위급상황 대비 시민대피시스템 구축
 - － 기상·지리·교통정보 활용하여 즉시 대응 가능한 시민대피 모델 개발(30백만원)
- (방재역량 강화) 방재요원과 지역주민의 방재훈련·교육 내실화
 - － 방사능방재요원 교육(신규, 보수 교육) 정규화, 시설 주변지역 주민·학생 방재 교육
- (방사선량 감시 강화) 방사선량 감시체계 실시간 공개 확대, 이동 측정시스템 본격 운영

③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상시 감찰활동 강화

- (안전감찰 활동)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안전분야 감찰로 각종 사고예방
 - － 안전감찰계획 수립, 재난예방·대비조치 및 종합상황실 운영 등 감찰
- (취약분야 감찰) 재난안전 취약분야에 대한 특정(수시) 안전감찰 추진
 - － 취약시기(동절기, 명절, 대설 등) 또는 재난관련 관심사항 발생 시 분야별 감찰
 -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예방조치 및 재난대비태세 확립 중점 점검
 - － 비위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 및 사후관리 철저

3. 현장중심의 재난예방과 사회안전망 구축

- ◇ 재난안전상황실 초동 대처 강화 및 신속한 상황 전파, 재난정보 관리
 - ◇ 선제적 재난 대비 및 재난보험 가입 확대를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

①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관리 체계 확립

-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24시간 빈틈 없는 상황관리 체계 유지
 - － 각종 재난정보를 실시간 수집·분석·전파, 재난 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
- (지능형 예·경보시스템 구축) 신속한 재난상황 전파 체계 마련
 - － 재난영상감시 CCTV, 재난방송장비, 재해문자 전광판 등 주요 예·경보시설 확충
- 통제관제형 실시간 정보수집 재난안전상황관리
 - － 기관별 보유자원등을 연계 활용한 재난안전통합영상지위체계의 효율적 운영

② 선제적 재난예방시스템 구축

- (재난 상황별 대응) 효율적인 재난대응을 위한 상황별 대응계획 마련
 - － 대응절차, 상황판단회의, 13개 실무반 협업계획,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등
- (취약시설물 관리) 안전관리대상 시설물 등 시기별 체계적 관리
 - － 시민참여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한 안전위험요인 제거
 - － 시특법 제1·2·3종시설물, 지역축제장 등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시설관리
- (한 발 앞선 재난대응) 이상기후 대비 계절별 사전대비체계 강화
 - － 여름철(5.15~10.15), 겨울철(11.15~익년3.15) 등 사전대비기간 운영
 - － 폭염, 대설, 한파 등 수시변동 기상예에 한 발 빠른 대비·대응체계 구축
- (지진방재 대책)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맞춤형 ‘지진방재 연구용역’ 시행

③ 재난안전복지 극대화를 위한 재난보험 가입 확대

- 자연재해 피해 시 실질적 보상을 위한 ‘풍수해 보험’ 가입 확대
-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제고
- 재해 위험요인 해소를 위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시행

4. 재난대응 역량 제고 및 민·관협력 확대

- ◇ 재난안전 종사자 및 시민 등 실전적 교육·훈련으로 현장 대응력 제고
- ◇ 유관기관·단체 간 협업강화 및 안전의식 제고로 신속한 복구체계 구축

① 재난관리 역량강화 기반 조성

- (재난관리자원 체계적 관리) 신속한 재난현장 수습 지원을 위한 비축관리
 - － 자재·장비·인력 등 자원공동활용시스템 등록 및 자원이동 훈련 실시
- (재난관리 실태 평가 만전) 선진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책임성 강화
 - － 중앙 연계 평가지표에 의한 자치구 재난관리 평가, 인센티브 제공
- (종사자 전문교육) 시·구, 공사·공단 등 재난관리 종사자 역량 제고
 - － 자체 전문교육, 유관기관 합동 워크숍, 전문교육기관 위탁, 전문가 컨설팅

② 실전적 현장 대응력 강화와 실효성 확보

- (재난대응 훈련 내실화) 대응매뉴얼 점검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 － (안전한국훈련) 재난종합 정기훈련, 5월 중 5일간, 90여 기관·단체 참여
 - － (상시훈련) 재난유형별 상시훈련실시로 훈련체계 및 실효성 제고
 - － (상황전파훈련) 불시 재난상황 전파 및 대응상태 점검
- (매뉴얼 정비) 골든타임 확보와 현장에서의 실효성 있는 대응력 제고
 - － 30종 매뉴얼 점검·훈련 결과 개선사항 보완, 다중이용시설 매뉴얼 작성·훈련

③ 민·관협력의 재난대응 체계 강화

-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운영) 민간부문과의 인적·물적 협력체계 구축
 - － 15개 민간단체가 재난관리 주체로 참여, 역할부여 및 대응 협력
- (민·관 거버넌스 확대) 유관기관·민간단체 간 정보공유 및 협업 대응
 - － 지역자율방재단 재난 예찰 및 대응·복구,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
 - － 지역방송사, 군부대, 자원재활용협회 등 재난관리 유관기관·단체 간 협업
- (재난안전의식 제고) 재난에 대한 시민의식 개선과 참여 활성화
 - － 재난포스터 공모(4월중), 재난영화제 개최(9월중), 재난사진 순회전시 등

5. 지역안보태세 확립 및 생활민방위 역량 강화

- ◇ 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 및 비상대비태세 확립으로 지역 안보 강화
- ◇ 비상시 신속·정확한 상황 전파 및 대응을 위한 상시 민방위태세 확립

① 확고한 지역안보태세 확립

- (통합방위역량 제고) 민·관·군·경 상호 협력체제 구축
 - － 통합방위협의회(분기1회), 예비군의 날 기념식(4월), 대전지구전투 전승기념식(7월)
 - － 명절·연말 군·경부대 위문, 군 주요지휘관·성우회 등 안보관련 단체 격려
 - － 예비군부대 지원(79백만원), 공직자 안보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체험 추진 등
- (비상대비태세 확립) 전시 등 국가비상사태 대비
 - － 동원자원 및 인력조사(2월~4월), 을지태극연습 및 화랑훈련(5월), 인력동원훈련(6월), 충무시행계획 수립·관리(25개 계획)
 - － 비상 시 대비를 위한 충무시설 관리·운영 강화
- (국방안보도시 육성) 관군협의회를 통한 상생발전 도모
 - － 관군 협의회(반기1회), 군 장병 시티투어(연2회), 국군장병 음악회(1월)

② 시민과 함께하는 생활민방위 역량 강화

- (누수없는 자원관리) 지역 안전지킴이를 위한 민방위대 편성 교육·훈련
 - － 민방위대(지역대, 직장대, 기술지원대) 편성 통지 및 관리 강화
 - － 지역내 재난 예방·대응·복구를 위한 민방위대 육성 및 생활안전 역량 제고
- (시설관리 철저) 민방위 시설·장비의 관리를 통한 유사시 효율적 활용
 - － 민방위 대피시설(746개소)기능 강화 및 관리체계 개선
 - － 비상급수시설(196개소) 수질안전성 확보 및 유사시 안정적 급수공급

③ 비상시 대비 신속한 정보발령 전달태세 구축

- (정보통제상황실 운영) 화재 등 대형 재난 발생 시 상황 전파
 - － 연중무휴 24시간 빈틈없는 상황근무체계 유지 / 2명 3개조 3교대
- (정보시설 확충) 시설 확충과 기능보강 등 정보시설 안정적 운영
 - － 노후 정보단말기(사이렌) 교체(8개소) 및 신설(3개소), 위성수신기 교체(4개소)
 - － 방송국 연결장비 보강(신설1: 대전TJB / 교체3: 대전KBS, MBC, TBN)
- (정보대응체계 확보) 정보시설(56개소) 정기점검(매월), 구동 정보업무담당자 현장교육

6. 시민생활건강 분야 특별사법경찰 활동 강화

- ◇ 대전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지 주변 식품, 환경 등 민생침해 사범 적극 단속
- ◇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자율 방법활동 지원 및 치안협력체계 구축

① 민생 유해 사범의 효율적 단속과 강력 수사

- (수사분야) 시민건강과 먹거리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7개 분야
 - － 식품, 공중위생, 의약품, 환경, 원산지표시, 축산, 청소년보호
- (수사방법) 분야별 기획수사 및 유관기관 협력·공조수사
 - － (기획수사) 시기·계절별 기획수사 및 사회적 이슈에 따른 기획수사
 - * 관광지 주변 음식점·다중이용시설, 계절적 환경오염 사업장 기획 수사 등
 - － (공조수사) 단속기관 및 관련부서와 정보공유 및 협력·공조수사 효율성 도모
 - * 검찰청, 식약처,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 및 부서와 수사계획·수사결과 공유

② 특별사법경찰 수사역량 강화

- (수사역량 강화) 유관기관과 협업 및 전문성 확보로 민원 최소화
 - － 유관기관·관련부서와 협력 : 단속 및 유형별 발생 현황 공유, 협업 등
 - － 전문성 제고 : 기본 및 심화교육 실시, 지명분야 전문직위 전문관 확대
 - * 전문교육기관 (법무연수원, 식약처, 관세청 등), 수사(환경, 식품) 전문 직위지정
- (수사자료 공표) 수사성과 홍보로 시민제보 및 범질서 이행분위기 조성
 - － 온라인 및 오프라인 홍보로 유해업소 등에 대한 시민 경각심 고취
 - * 단속계획 홈페이지 공개(연2회), 수사결과 언론·SNS공개 및 관련기관 제공(수시)

③ 민·관·경 협업 범죄예방 기반조성

- (치안협의회 운영) 범질서 확립과 지역 치안환경 개선
 - － 치안주요사업 협의 및 안건 논의(정기회 및 임시회), 실무협의(수시)
- (자율방법대 활동지원) 안정적인 방법활동 지원과 모범대원 사기진작
 - － 자율방법대 현황조사 및 초소개선 등 환경개선 사업비 지원
 - － 자율방법대 사기진작 시책 추진(모범 자율방법대 표창 등)

